

공산품 인증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식, 평가 및 인증제도의 개선 방향

최지연* · 이상봉** · 정길호*** · 강미영****

본 연구에서는 공산품 인증시장과 인증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인증관련 기업 근로자의 인식, 인증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 근로자의 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 및 현황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인증에 대한 기업 근로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공산품 인증 시장의 방향 및 인증제도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산품 인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정부기관들의 공조와 협력은 필수적 조건이라고 하겠다.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인증심사원의 능력과 자질 함양, 시판품조사 등 인증제품 사후관리 강화, 인증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근로자의 인식개선 및 홍보, 소비자 및 기업근로자 대상 인증 관련 교육 등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국내 시장 뿐만이 아닌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는 품질을 유지하고 KS 인증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KS 인증 사후관리 주기를 단축하고 심사를 보다 엄격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 내부적으로도 품질관리 담당자의 고용 연속성, 품질관리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사후관리 강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복잡하고 다양해져가는 시장과 사회 및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증제도 운영이 중요하다. 사회구성원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지속가능한 인증제도, 기술고도화 및 소비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인증제도, 융복합 산업의 증가와 같은 기술 및 산업 트렌드를 반영하는 KS인증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 결국 국내외 인증관련 정보교류 및 정보축적, 관련 전문가, 이해당사자들과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셋째, 공산품 인증기관의 인증목표가 기업과 소비자 신뢰와 혜택에 초점을 두는 상생적 인증제도가 되어야겠다. 특히 법정 인증간 중복인증 품목이 증가하고 동일품목에 대한 중복시험으로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증 간 중복되는 품목에 대해 시험결과가 상호 인정, 효율적인 인증제도 운영 등으로 기업의 인증제도에 대한 요구 및 만족도를 반영해야 한다.

주제어: 공산품 인증제도, 인증제도에 대한 기업 인식, 인증제도에 대한 기업 평가, 인증제도 방향

*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jychoi@knue.ac.kr)

** 한국교원대학교 기술교육과 교수(sbyi@knue.ac.kr)

*** LG강남CS 대표이사(jeo1012@hanmail.net)

**** 강서구의회 구의원(kangmy87@hanmail)

I. 서론

우리나라의 최초 인증인 KS 인증이 1963년에 시작된 이후에 법정인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4개 부처에서 약 70개의 법정 의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24개 부처에서 131개의 법정 임의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정부 부처별로 법정인증을 운영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17.7%, 인증 34건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김재만, 김광수, 2015). 또한 법정 의무인증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전체의 21.4%(15건)으로 많은 의무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20.0%(14건)을 운영하고 있다(김재만, 김광수, 2015). 2013년 현재 표준·기술을 기반으로 정부 부처 개별 법령에 따른 인증 종류는 112개에 달하고, 민간인증 73개를 합하면 185개에 이른다. 중소기업들은 평균 14.9개의 제품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23% 인증은 검사항목이 중복되고 내용이 유사하다. 이로 인해 제품인증 관련 매년 3,23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인증 취득까지 평균 180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복잡 다양한 인증제도에 대해 중소기업은 인증사후관리, 과도한 인증비용을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KS 인증 통합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중소기업 인증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해 신규 인증 난립을 방지하고, 총리실 내 인증관리위원회를 두고 신규인증 도입 타당성 검토, 인증간 상호중복 심의, 부처간 협의조정 등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 인증제도 수가 증가하여 기업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우리나라의 인증제도가 지나치게 많고, 그에 따라 인증기관의 숫자도 많아 인증제도를 통폐합하

여 중복인증, 중복시험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국내 인증제도는 크게 의무인증제도와 임의인증제도로 나눌 수 있다. 의무인증 형태는 국가가 법으로 정해 강제로 시행하는 제도로 KC 인증 마크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임의인증 제도는 법에 근거한 법정 임의 인증제도와 법적 근거 없는 민간인증으로 나눌 수 있다. KS 인증제도는 법에 근거한 민간 인증으로써 각종 제품인증 중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시작된 인증이며(1963년 제정), 인증 품목수가 많다. KS가 보급되던 시절에는 통일된 규격과 품질을 정부에서 보증함을 강조하였고 KS 인증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와 신뢰는 높아 왔다(매일경제, 1983년 8월 12일).

그러나 최근 기업의 기술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는 많은 인증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일정 수준의 품질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상향조정되었으나 각종 인증 기준이 이와 같은 추세에 제대로 대응했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중소기업의 인증 참여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미 대기업은 국내 인증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서 적극적인 참여가 되지 않고 있다(매일경제, 1983년 8월 20일).

KC 인증, KS 인증, ISO 인증, 고효율 인증, 환경표시 인증 등 너무도 많은 인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인증들을 획득·유지하기 위해 시험, 검사 등 인증 관련 막대한 비용과 시간투입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중소기업신문, 2013년 3월 27일). 중소기업신문 뉴스에 따르면 한 소프트웨어 업종 사장은 GS 인증을 받으면 10억 원짜리 정부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에 1천만 원도 넘는 인증비를 내고, 1년여 걸쳐 잦은 출장 끝에 인건비 8천만 원을 들여서 인증을 획득했다. 하지만 조달계

약 자체를 따내기는 어려웠고, 3천여 개 동종업체도 인증을 받았지만 조달계약 자체가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전기용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똑같은 전기용품을 전기용량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신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사전검사를 받기위해 수백만 원씩 비용이 들어간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에 납품을 할 때 마다 시판 때 받았던 각종 검사를 또 다시 받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최근 공산품 인증제도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유사인증을 통합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능형로봇품질인증, 물류표준설비인증,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을 KS인증으로 공산품 인증제도의 도입시기의 우리나라 산업 환경과 현재의 산업 환경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변하였다. KS 인증에 대한 위의 목적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용하고 명시적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현재의 인증기준에 따라 공산품 기술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오늘날 ICT의 발달로 다양한 거래가 발전하였고 거래의 안정성은 인증과 관계없이 확보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 환경의 변화는 인증제도 운영 전반이 변화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대외 무역에 있어서 인증제도에 기대되는 역할은 인증에 대한 최종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시켜 실질적 무역상 기술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산품 인증 제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되 인증기관의 운영은 국가기술표준원 중심의 법에 의하기보다 국제기준 ISO 17065에 따른 인증체계의 구축과 공산품인증의 점진적인 민간 이입을 통한 차별화와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이미 개정된 공산품인증제도의 운영에서 관련 주체들의 공산품인증

관련 질 향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또한 컨설팅 및 교육 관련 산업 분야와 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공산품 인증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증 자체의 국민 또는 소비자 신뢰도가 중요하다. 소비자의 신뢰도는 정부정책에 따라 사용자 기반(인증 관련 운영주체 등)을 독점적으로 확보하는 경우 높아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KS, KC등 공산품 품질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전폭적인 신뢰는 국가가 운영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인증기관 복수화 시행시 ISO의 경우처럼 신뢰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산품 인증의 내실화를 먼저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인증시장은 변화하고 있고, 인증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식 및 요구도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산품 인증시장과 인증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인증 관련 기업 근로자의 인식, 인증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 근로자의 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 및 현황을 조사하였다. 끝으로 공산품 인증에 대한 기업 근로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공산품 인증 시장의 방향 및 인증제도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II. 인증제도의 이해

1. 인증제도의 이해

인증은 그 분류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인증대상을 기준으로 제품인증, 시스템인증, 기술인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품인증은 제품에 대한 인증으로 주로 제품의 안전, 품질, 성능 등

〈표 1〉 산업부 법정 인증제도 법령 현황(총 32개)

관련 법률	인증 제도 수	관련 법률	인증 제도 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2	계량에 관한 법률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	광산보안법	1
도시가스사업법	1	부품 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
산업발전법	1	산업융합촉진법	1
산업표준화법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
석탄산업법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1
유통산업발전법	1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	전력기술관리법	1
지능형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	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1

출처: 허경옥, 이재학, 전병호(2015).

에 대해 표준(기술기준)에 적합함을 평가하는 인증을 말하며, KS 인증 등 25개의 인증이 이에 해당된다. 시스템 인증은 조직이 관련 인증 표준 또는 기준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행하고 있음을 평가하는 인증을 말하며 품질경영체제 인증(ISO 9001) 등 4개 인증이 해당된다. 한편, 기술 인증은 시스템이 아닌 제품혁신이나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술에 대한 인증을 말하며 전력신기술지정 등 3개 인증이 대표적이다.

공산품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32개의 법정인증제도 관련 법령은 총 24개이다. 이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공개 인증을 규정하고 있어 단일법에서 가장 많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은 3개의 인증제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은 각각 2개의 인증을 규정하고 있다. 즉 2개 이상의 인증을 동일 법령에서 하는 것은 5개 법령으로 전체의 15.6%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공산품 인증제도는 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최초 심사(평가)시 대체로 제품시험(또는 설비성능 검사)과 공장심사를 모두 수행해 왔다.¹⁾

기업이 인증을 획득한 이후 사후관리 심사 주기 및 방법을 살펴보면 사후관리심사는 공장심사와 제품심사 또는 설비 성능검사를 병행하는 체계를 두고

1) 공장심사: 인증심사기준 및 공장심사보고서를 공통 적용, 제품심사(또는 설비 성능검사): KS표준 또는 해당 인증 표준별 적용

〈표 2〉 법정인증제도의 최초 인증심사

구분	인증심사		평가 방법	합격 점수
	시스템심사	제품심사		
KS 인증	공장심사	제품심사	합격/불합격	80점 이상
지능형로봇 품질인증	공장심사	제품심사	합격/불합격	80점 이상
물류표준설비인증	현장심사	물류설비(성능검사)	합격/불합격	70점 이상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일반심사(공장확인)	설비심사(성능검사)	합격/불합격	75점 이상

출처: 허경욱, 이재학, 전병호(2015).

있다. 심사주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의 경우 1년, 지능형로봇 품질인증은 2년, 그 외 인증은 3년이며, FCS인증은 1년 제품심사, 물류표준설비인증은 1년 정기검사 등 매년 사후관리 심사를 병행하고 있다. 시판품 조사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을 제외한 모든 인증이 실시하고 있다. 다만 지능형 로봇인증의 경우, 시판품 조사시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

2. KS 인증제도란?

KS(Korean Standards)인증은 산업표준화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정임의 인증제도이다. KS 인증 대상은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KS표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품목들이다. 1963년 11월 1일 제1호 인증 기업(금호전기)이 나왔고 2013년 말 현재 KS표시 지정 품목은 1,082개이며 6,785개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KS 인증을 취득하였다. 현행 KS 인증제도는 1998년 민간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독창적으로 만든 제도이다. 정부가 통제를 하고 다수의 민간 기관들이 참여하되 전문성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KS 인증은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고유의 국가인증제도(법정임의)라고 할 수 있다. KS 인증을 받은 기업은 KS 마크(㉿)를 제품, 포장

또는 납품서 등에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고 정부 조달 시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부여받으며 전기용품 등 15개 법령에 의한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고 있다.

KS 인증제도의 도입 목적은 첫째, 기술향상, 생산 효율제고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둘째, 거래의 단순, 공정화 및 소비 합리화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셋째, KS제정을 통하여 시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호환성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KS 인증이 시작된 초기에는 정부에서 직접 인증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1998년 민간 인증기관 (공산품의 경우 한국표준협회, 식품의 경우 한국식품연구원)을 지정하여 민간에 KS 인증 업무를 위탁시켰다. 다시 말해 최근까지 표준협회가 KS공산품 분야 전반 인증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2012년 정부는 광·공업품에 한해 KS 인증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KS 인증기관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KS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 및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산업표준 KS는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된 국가표준을 말한다. KS 인증제도는 산업표준화법 제3장에 따라 인증기관 지

〈표 3〉 KS 인증 관련 주요 법령

법령	공포 및 시행시기	기타
1. 산업표준화법	15. 1.28 공포; 15. 7.29시행	
2.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15. 1.6 공포; 15. 7.7시행	
3.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15. 1.23 공포; 15. 1.23시행	* 예외 별표8, 9 (인증심사기준, 절차및방법) 15. 7.7 시행
4.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15. 2. 25 공포; 15. 7. 7시행	* 예외 제12조(인증기관 지정 심사) 15. 2.25 시행
5. 일반인증지침(미고시) ①(제품) KSQ8001: 2015 KS인증제도	- 제1부 : 제품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지능형로봇품질인증, 물류표준설비인증 통합 및 포섭 * 공장심사보고서 및 인증계약내용 수록	
②(서비스) KSQ8002: 2015 KS인증제도	- 제2부 : 서비스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서비스심사보고서 및 인증계약내용 수록	
③(신재생에너지) KSQ8003 : 2015 KS 인증제도	- 제3부: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신재생에너지설비 전용 공장심사보고서 및 인증계약내용 수록	

정, 제품 등의 인증 및 인증심사를 진행하며,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제26조, 제30조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제16조, 그리고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4장, 제5장, 제7장, 제13장 규정에 따라 인증절차가 수행된다. 현재 KS는 서비스를 포함한 21개 분야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다.

산업표준화법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2013년부터 기업이 KS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의 웹문서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기업이 신규로 인증을 신청한 후 신청비를 납부하게 되면 인증기관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심사원 선정을 한 다음 심사계획을 기업 측에 통보한다. 기업은 공장심사비, 출장비 납부 등의 심사준비를 하면 인증기관은 공장심사를 그리고 지정시험기관에서는 제품심사를 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인증기관이 심사보고서를 검토하면 표준협회의 인증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심의한 후 합격한 기업에 한해서 KS 인증 합격 통보 및 인증서를 발급한다.

III. 인증시장의 이론적 논의와 인증시장의 변화

1. 인증시장에 대한 이해

인증제도는 제품품질안전 기준에 따라서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증거, 즉 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소비자는 인증마크 획득여부를 구매의사결정에서 정보로써 활용한다. 이때 인증마크를 받는 기업군 인증마크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인증 시장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과 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 사이에는 간접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한다(강병구, 전병호, 2010). 소비자들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개인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거나 정보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인증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강병구, 전병호(2010)는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인증기관은 플랫폼 사업자로서 인증업체와 구매자를 연

〈표 4〉 인증시장의 양면시장 성립 요건

구분	양면성		플랫폼	간접적 외부효과
	side A	side B		
내용	인증기업 (싱글호밍)	일반기업, 소비자 등의 인증제품 소비자(멀티호밍)	독점적 플랫폼	인증마크를 받은 제품/서비스 구매 고객군이 커질수록 인증기업들의 이익이 커짐

출처: 강병구, 전병호(2010).

결해 주는 특성으로 인하여 인증제도는 양면시장이라고 정의내렸다. 강병구, 전병호(2010)는 인증시장은 중개/거래연결 플랫폼의 성격을 띠고 있는 시장으로써 다양한 인증마크가 플랫폼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경쟁적 특성과, 특정 인증마크가 존재하는 독점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강병구(2014)는 KS 인증제도는 법정 임의인증으로서 양면 시장(two-sided market)의 특성(Fasten and Hofmann, 2010)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써 시험인증을 받는 기업과 인증을 정보로써 활용하는 소비자로 분류하였다.

한편, 서창적, 박진한(2013)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려할 요인으로 플랫폼 매력도, 외부성의 내부화, 보완재, 간접 네트워크 효과 등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품품질안전 인증의 경우 정부의 제품안전 정책에 따라 사용자 기반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한편, 공산품인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증 관련 인접 산업의 경쟁력도 중요하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컨설팅, 시험소의 시험성적서 등 보완적인 인접산업 분야의 비즈니스가 필요하다. 만약 유럽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사실상 CE마크를 획득해야 하며, 만약 독일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DIN의 규격을 충족시키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이 인증을 받기 위하여 인증 준비과정에서의 행정

적, 기술적 컨설팅이나 교육 등이 필요하다. 즉 인증의 경쟁력 강화는 인증기관의 경쟁력도 중요하나 인접 산업의 경쟁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인증제도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증 인접 분야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또한, 인증시장의 경쟁력은 소비자신뢰 및 복지증진이 되었는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인증시장이 어떤 시장인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KS 인증시장에 경쟁을 존재시켜 인증시장의 경쟁력강화 나아가 선진적 인증제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기업의 인증비용 등 인증 관련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KS 인증제도 운영의 목표로 포함되어야 한다. 인증시장에 경쟁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구매라는 형태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가격 및 공급 등 시장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 같은 의사결정권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가격 등 구매에 필요한 소비자정보가 어느 정도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KS 인증시장은 KS 인증기관 들 간의 경쟁을 추가시킨다 해도 인증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소비자에게 인증제품의 가격 및 공급 등의 결정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며, 또한 인증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소비자 자신이 KS 인증과 관련한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하여 시장이 경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증 시장은 시장

자체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시장구조와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특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KS 인증기관 복수화가 인증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 특히 소비자도 참여하는 시장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2. 인증시장 환경의 변화

공산품 인증 관련 사회적, 경제적 환경은 변화되고 있다. 인증제도 시장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1) 공산품 인증 경시 경향

최근 기업, 소비자, 사회 측면에서 공산품 인증의 필요성 인식, 인증의 중요성 인식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강병구, 2014). 공산품 인증의 주요 수요 산업인 자동차, 섬유 등에서 인증 활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자동차 부품이나 섬유 분야에서 인증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외국이나 타 인증 또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이 국내 공산품 인증보다 우수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한국표준협회, 2008). 결국, 신산업분야, 융합산업분야 등의 경우 국내 인증이 아닌 다른 외국의 인증마크나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신산업분야 및 융합 산업 분야에 대한 인증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듯 각 산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인증이 다르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인증표준을 개발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인증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환경으로 변모하고 있다.

한편, 인증의 경시 경향의 주요 원인은 인증제도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및 최종 소비자의 지원과 관심이 부족하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인증 관련 관심과 논의는 기업실무자 및 주요 정부기관으로 국한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인증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신뢰도 및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와 사회의 관심과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겠다.

2) 인증시장의 환경변화

KS인증마크 외에도 KC 마크의 등장, 민간인증, 해외유명인증 등 다른 인증들의 확대로 국내 공산품 인증의 경쟁력 약화가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KS의 경쟁 인증마크라고 할 수 있는 KC마크가 아직은 소비자들에게 생소하나 소비자들의 KS 마크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ISO 인증, UL인증, EC인증 등이 국내에서 활성화 되고 있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증의 종류가 많은 상황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인증의 차별성 인식이 감소하고, 모든 인증이 서로 비슷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질 수 있다. 특정 인증마크에 대한 경쟁적 인증마크가 다수 증가하고 있으므로 인증제도가

<표 5> 환경변화에 따른 인증제도의 도전 과제들

인증 경시경향	인증시장 변화	산업계 요구의 변화	사회적 요구의 변화
- 주요 산업분야 필요성 감소 - 최고경영자 관심 미비	- 다양한 인증 등장 - 법정입의인증 및 민간인증 증가	- 선진국 인증기관 진출 - 신산업등장 및 신속대응 필요 - 기술융합화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요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요구

출처: 허경욱, 이재학, 전병호(2015).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정인증은 정부가 에너지절약, 신기술인증(NET), 환경마크 등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시행하는 인증으로 2010년 기준 법정인증 중 의무인증이 14개, KS 인증을 포함한 임의인증이 18개에 달하고 있다. 또한 Q 마크, 공기청정 마크 등 민간인증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같은 인증은 민간기관이 자체 사업의 일환으로 약 6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민간인증 마크들은 기업의 적극적인 마케팅 및 홍보로 인해 시장에서 소비자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있고, 정부 공산품 인증에 대한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간인증 마크의 대두는 소비자의 정부 인증 필요성 및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해, 민간인증 마크는 시장에서 인증 마크의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미치므로 민간 인증과의 경쟁이 인증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KS 인증의 신뢰 형성 및 유용성이 인증 정책의 중요한 기준으로 부각되고 있다.

3) 산업계와 사회적 요구의 변화

시장의 글로벌화가 계속되고 있으나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인증제도가 미흡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인증이 국내 대표적 인증이라고 할 수 있는지 또는 인증을 너무 과신하고 있는지를 고심해 보아야 하는 시점이다. 인증이 전통적으로 발달한 선진국의 인증기관들은 해외 현지화 전략을 통한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고 이들 선진국 인증기관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국내 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 UL인증 등 선진국 인증기관의 국내 활동은 국내 공산품 인증과 중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증의 신뢰성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IT, BT, NT 등 새로운 산업의 등장 속에서도 대응하는 인증 개발도 시급한 상황이다. 기술

융합 및 신사업 출현은 한국의 기술 및 산업 발전의 중요한 사항인데 이와 관련한 전략적 표준의 접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관련 분야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산업의 변화 및 융·복합화의 추세를 선도할 수 있는 표준개발 및 공산품인증제도의 개발과 발전이 시급하다.

결국, 인증은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소비자 또는 사회적 요구도 반영해야 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비자욕구가 높아지면서 인증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넘어 소비자의 사용단계에까지 인증제도가 관여해야 하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표준제정 및 인증제도 개발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제품표준으로써 인증마크가 아닌 다른 인증이 개발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공산품 인증제품의 경쟁상대가 될 것이다. 이미 선진국의 인증기관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품의 인증 요구를 파악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가로의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결국 인증이 이 같은 국민과 소비자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맞춤형 인증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인증이 선진국의 표준과 인증제도 전략에 맞 대응할 수 있는 국내 공산품 인증제도의 경쟁력 강화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4) 인증제도의 목표 및 패러다임 변화 요구

최근 산업환경의 변화, 사회와 소비자의 요구 등을 감안할 때 인증제도의 목표 및 패러다임 설정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 인증의 목표는 거래의 투명성 제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시적 도구 제공, 최소한의 소비자안전보장 등 초기 산업사회의 정착에 필요한 목표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목표는 현재 산업구조나 기술수준, 기업의 발전이나 수요, 국민과 소비자의 의식수준을 충족시

키기에 부족하다. 세계 경제환경이 고도화되고, 경쟁 범위와 강도가 확대되고 강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추세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 및 패러다임의 인증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제, 국민과 소비자신뢰 확보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인증제도의 목표가 재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인증제도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주요 국가의 표준 및 인증의 목표를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독일 표준협회(DIN)의 표준화 목표는 자국의 기업과 사회가 지역 및 글로벌 시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며 개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한편, 프랑스 표준협회(AFNOR)의 표준화 목표를 살펴보자. AFNOR는 표준화를 개인의 요구와 사회(공동체)의 요구를 성공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를 삼고 있고 표준이 시장의 요구를 항상 충족시켜 주는 것이 목표이다. 미국 표준협회(ANSI)는 자발적이고 합의에 의한 표준이 미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미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간단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국 표준기관들은 산업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표준을 활용하는 단계는 넘어선 것으로 보이나, 우리의 표준 목표는 비교적 미시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선진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거시적 수준의 목표, 즉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자국 기업의 성공에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의 새로운 추세를 표준화 전략에 반영하여 자국의 표준이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표준 및 인증제도가 유연성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사회의 요구에서 벗어나 글로벌화 된 세계경제환경과 정보화 사회의 요구 그리고 국민과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전략적 목표 및 패러다임을 설정하여야 한다.

III. 국내 ISO 인증제도 운영 현황 및 주요 이슈

한국인증지원센터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ISO 인증은 스위스에 소재한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인데 이 가운데 주로 수출에 활용되는 인증은 경영 및 환경에 관한 것으로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ISO 14001(환경경영인증) 등이다. 특히 ISO 14001의 경우 국제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출기업이 반드시 갖춰야 할 자격요건이 되고 있다(경기일보, 2015년 8월 15일).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ISO 인증 취득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시간적 문제, 인증 이후 관리 등의 이유로 취득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보통 컨설팅 업체를 통해 인증취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만 기업은 적게는 12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비용이 든다. 또한 시험비용과 인증기관의 검증까지 걸리는 1~3개월간 출장비와 시험비를 지급해야 하는데다 인증을 받은 뒤에도 매년 갱신해야 해 인증과 관련한 비용으로 수백만, 수천만 원이 들어가야 하는 실정이다.

ISO 인증기관과 컨설팅 업체가 수십, 수백 곳에 달하는 점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국내 ISO 9001 인증기관은 한국능률협회와 한국표준협회 등 42곳, ISO 14001은 인증기관이 38개에 달한다. 여기에 인증 취득을 돕는 컨설팅업체는 100여 곳이 넘는 상태로, 기관마다 컨설팅 비용 또한 제각각이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많다. 최근 무역협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ISO 14001을 수출 계약 이전에 미리 취득한 중소기업체는 28.7%에 불과했다. 이에 중소기업청에서는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국제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혜택을 받은 업체는 300만 중소기업 중 2014

년 1천 600개에서 2015년 1천 500개로 줄어든 데다, 한 번에 2개 인증에 대한 비용만 지원받을 수 있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제 인증과 관련된 보다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면, 환경인증 등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 국내에 적용되고 있는 인증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근본적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 견해이다.

1. 국내 ISO 인증제도의 개요

ISO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의 규격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최근 ISO 9001(기업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환경경영관리시스템),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ISO 10002(고객만족경영시스템), ISO 27001(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우리 기업 인증이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ISO 9001인증은 특정 조직의 품질경영시스템이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마련한 국제규격에 적합하게 구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50인 이상 기업 대부분이 이 인증을 소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까지 5만8천여건(세계 12위)의 ISO 인증서가 발급되었으며, ISO 9001(품질경영관리시스템)과 ISO 14001(환경경영관리시스템)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ISO 인증제도는 기업의 경영시스템을 ISO 표준에 따라 인증해 주는 민간 자율임의인증제도로써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ISO 900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ISO 14000)에 근거하여 각국의 인정기구가 인증기관을 인정하고 해당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한다. 대표적 인증기구로는 한국인정원(KAB), 미국(ANAB),

영국(UKAS), 일본(JAB) 등이 있다.

2. 국내 ISO 인증제도 운영 현황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ISO 인증 시장규모는 국내 발급 수수료로 연간 약 1,570억원이 소요되고 있고 이 중 국내 인증기관으로 580억원, 외국계 인증기관으로 990억원의 수수료가 지급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심사자격인증원(KAR)에 등록된 심사원은 2010년 기준 총 4,381명이다. ISO 인증의 누적건수는 2010년 기준 총 58,704건 이다. ISO 인증 획득시 재정부, 행안부, 산업자원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등 6개 부처가 각종 계약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또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중앙정부 외에 46개 시·도 및 시·군·구는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컨설팅비용 포함) 200~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수출입은행 등에서 평가시 가점부여, 교육지원 등을 하고 있다.

3. 국내 ISO 인증 관련 문제점 및 사고 사례

1) 부실인증 문제

최근 우리나라에서 ISO 인증심사원의 부정행위, 인증 브로커·기관 난립에 따른 과열경쟁, 외국계 인증기관 관리 소홀 등 부실인증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2015년 6월 인증서를 위조하거나 허위심사 및 사문서 위조로 외국계 인증기관 3곳을 적발하고 심사원 7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사건이 있었다. ISO 부실인증 유형은 하루 1개 기업만 심사하는 규정을 어기고 동일한 날짜에 2개 이상의 기업을 심사하는 중복심사, 인증기관에 소속된 심사원이 컨설팅을 겸업하면서 동일 기업에 컨설팅과 인증심사를 수

행한 자문규정 위반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ISO 부실심사 문제는 오래 전부터 발생하여 왔다. 2007년부터 ISO 인증의 신뢰성제고를 위해 인증 현황 보고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 왔다. 이미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ICIN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국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분기별 인증현황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인증 관련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ISO인증 부실심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2) ISO 인증 지원제도를 악용한 컨설턴트 난립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ISO 인증획득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업의 무분별한 인증 관련 컨설턴트 업체의 난립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증획득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지원되므로 '기업에 부담이 안 가도록 최단 기간 및 최소비용으로 알아서 다 해 줄 테니 맡겨만 달라'는 식의 부실인증 권유영업이 만연하고 있다. 지원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많을 수록 컨설턴트의 영업행위 및 부정행위가 심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경우 ISO 인증 관련 서류검토 결과 컨설턴트 없이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한 건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져 컨설턴트 남용이 심각함을 알게 한다.

ISO 부실인증은 인증 보유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등 과도한 특혜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무분별한 인증을 남발, 부실인증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수의계약 혜택 등을 받기 위해 "정상적으로 심사하면 까다롭다"는 컨설턴트의 권유를 받아들여 심사와 자문병행금지 규정의 위반행위

를 묵인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ISO 인증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제품이 아닌 시스템 인증으로 획득이 어렵지 않음에도 수의계약 혜택은 계속 존속하여 인증남발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ISO 인증획득을 통해 품질(또는 환경) 경영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혜택을 받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는 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3) 인증심사시 자문 병행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ISO인증 심사과정에서 인증심사원은 컨설팅과 인증심사를 동시에 수행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자문 규정 위반시 인증심사원 및 소속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해지고 있으나 인증 컨설팅 업체에 대한 제재는 없어 컨설팅 업체의 이 같은 활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인증 컨설팅 회사들이 난립하고 있음에도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증원에서는 몇 개의 컨설팅 업체가 활동 중인지 정확히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컨설팅업은 자유업이므로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영업을 가능하고 간판도 "인증원" 식으로 붙여 마치 인증기관인 것처럼 위장하는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한편, 컨설턴트 개인의 경우 자문규정 위반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이 취소되면 외국계 인증심사원으로 소속을 옮겨 ISO 인증 컨설팅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컨설팅 회사 소속 컨설턴트가 인증 부정행위 등으로 문제가 된 경우 컨설팅 회사가 사업장 명칭을 수시로 변경하여 영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증 심사원의 자문규정 위반 사례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ISO 인증 보조금 지원을 위한 기업체 선정시 인증 자문컨설팅 업체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이와 관련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 지방자치단체 인증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절

ISO인증 부정행위로 인증심사원 및 인증기관이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인증서는 여전히 유효하여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인증심사에서 부정행위를 통해 인증서가 발급된 기업에 대해 사후관리를 통해 보조금 회수 또는 인증서 유효성 여부에 대한 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 같은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자문규정 위반 등 부정행위를 통한 인증획득에 대한 국가기술표준원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사후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다. 어떤 기업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ISO 인증 보조금만 지원받고 인증서 획득 이후 사후관리 등이 귀찮아서 인증서를 발급한 기관에 바로 반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ISO 인증 기준에 맞게 성실하게 수행하고 이를 계속 유지할 기업에 지원되어야 할 보조금이 예산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부실관리가 결국 인증 브로커 행위를 성행시키는 빌미가 되고 있다. 게다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바로 반납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담당 공무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5) 부실인증의 유효성 판단규정 미비

인증심사원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기업의 인증은 여전히 유효하며 ISO 인증 유지시 수의계약, 제한경쟁, 평가시 가점, 교육지원 등의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부실인증에 대한 유

효성 판단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즉 중복심사, 자문규정 위반 등으로 인증심사원 및 인증기관이 처벌을 받더라도 기업에 발급해 준 인증서는 유효하여 결국 기업의 부정 혜택을 받는 것이다. 부정행위로 발급된 인증서에 대한 인증서 재심사, 인증서 취소 등의 강제 지침·규정이 없어 인증의 신뢰성저하 문제를 야기 시킨다. 정당하고 공정하게 규정을 지켜 심사를 받아 인증서를 획득한 기업체와 부실인증으로 인증을 획득한 업체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부실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각종 지원 혜택을 받아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ISO 인증 지원 취지가 왜곡되고 있고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업이 필요한 것은 품질(또는 환경) 경영시스템이 아니라 인증서라는 기업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인증 관련 담당자의 경우 기업이 제시하는 인증서와 국가기술표준원의 ICIN 시스템을 통해서만 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할 뿐 신청기업의 인증 관련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6) 외국계 인증기관 관리 부재

우리나라에서 ISO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계 인증기관은 ICIN 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결과 현재 약 48개로 파악되나, ICN 시스템에서 파악되지 않는 업체를 포함하면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인증업체는 대략 90여 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외국계 인증기관의 인증 발급·관리건수, 소속 심사원 수, 수익 현황 등에 대한 관리는 커녕 그 현황에 대한 파악조차 충분히 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보고제도를 통해 외국계 인증기관을 파악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보니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미보고·허위보고에 대한 관리감독 부족, 인증기관의 현황 파악이 잘 되지 않고 있고 그 결과 허위·부실 인증이 만연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소속 인증기관의 경우 인증 관련 부정행위시 한국인정원을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적 제재가 가능하나 외국계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시정요청만 가능하다 보니 실효성 있는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이 외국 인정기관에 외국계 인증기관 및 심사원의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처벌 협조요청을 했으나, 조치결과에 대한 외국계 인증기관의 통보가 전무한 실정이다. 외국 인정기관은 한국인정원처럼 소속 인증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므로 한국 내 위반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외국계 인증기관의 이 같은 인증심사 부정행위를 제재하지 못하고 있어 ISO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있다고 하겠다. 외국계 인증기관의 신뢰도 상실은 일반 소비자 국민에 대한 인증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고 나아가 국가 신뢰도 추락과 직결되므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인증기관의 사회적 물가 발생해도 감시·감독은 한국계 인증 관련 인정기관 및 심사원에만 집중되어 외국계의 인증 관련 부정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심한 경우 관계기관의 감독을 피해 한국계 인증기관이 외국계 인증기관으로 이동하거나 한국계 소속 심사원도 활동의 자유를 위해 외국계 인증기관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인증심사원 등 관련 업무자의 한국계-외국계 인증기관 간 소속 이동이 자유로운 현실에서 외국계 인증기관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한국계 인증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의 효과도 감소할 것이다.

7)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미흡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 41조에서는 인증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관련 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각종 인증 관련 인증기관의 주요 보고의무 미행 또는 허위보고 시 관련 법률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과태료 부과 규정운영의 유명무실로 현재까지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 처벌 실적은 전무하다.

또한 이들 법령은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성만 언급할 뿐 과태료 부과대상, 부과절차,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불완전하여 과태료 부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게다가 감독기관은 수사권이 없고, 감독권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싶어도 법령에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인증기관들은 이러한 허점을 악용할 개연성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허위보고 이외의 허위심사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하여 심사원이 대상 기업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1~2시간만 심사하고도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등 명백한 부정행위가 묵인되고 있다. 결국 인증 관련 미보고, 허위보고, 기타 부정행위가 방조되어 ISO 인증에 대한 불신과 냉소, 신뢰성 저하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이들 법령에서 징역, 금고, 구류, 벌금 등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적 억제 효과가 전무하고 인정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자율적 통제가 미흡하다. 그나마 한국인정원과 심사자격인증원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인증심사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있는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가 인증발급업무 4주 정지이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인증기관의 대표는 소속 심사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전무한 실정이다. 인증기관 대표자는 감독상의 과실 책임이 있으나 인증 관련 국제기준,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등의 규정인 인증심사원의 성실의무 규정 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인증심사원의 고의적 부정행위는 적발이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감독기관에 의한 상시 감시 및 강력한 행정적 처분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한 부정행위 근절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V. 공산품 인증제도에 대한 기업 인식 및 발전방향

1. 공산품 인증제도의 발전방향

한편, 표준협회의 인증기업 대상 자문가 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라 공산품 인증제도를 둘러싼 내·외부적인 문제점들과 현황, 향후 KS 인증제도의 발전 방향을 정리·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또한 계속되는 시장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는 KS 인증제도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미래 산업 기반이 될 수 있는 표준의 개발과 인증제도의 변화가 시급하다. 기업규제완화라는 경직성에서 벗어나 사업자가 KS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기업 경쟁력을 자발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가 필요하다. 미래 신규산업 및 시장에 대응하는 공산품 인증제도 국가표준 및 공산품 인증제도는 융복합·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

신속하게 그리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공산품 인증제도는 미래 신규 산업의 시장 형성을 위한 기반 제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특히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수용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인증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신산업 및 신기술동향, 국민과 소비자요구 및 신뢰도에 대한 모니터링, 표준 및 적합성평가 관련 유연한 인증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에는 전문가, 이해당사자들 간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인증 품목들을 폐지하고 기술 융복합 관련 새로운 분야에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합적 인증제도의 가속화가 계속되어야 한다. 국내에는 201개 법정인증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300개 이상의 인증기관이 존재하여 기업들은 동일 품목에 대해서 중복인증과 중복시험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와 인증기관이 유사인증을 조속히 통합하고 인증의 종류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산업통상자원부의 KS 및 KC인증으로의 통합을 시작으로 기타 다른 행정부처가 관할하는 인증 등을 통합하여 중복인증의 폐단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연구자들은 KS 인증기관 복수화 및 인증절차 등의 완화보다 여러 인증의 KS 인증으로의 통합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 인증간 시험결과 상호인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유사 인증과의 활발한 통합이나 협력(예: 상호인정)을 통해 인증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인증제도가 되어야 한다. 상호인정 제도를 확대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ISO 9000 또는 별도의 강화된 시스템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KS 인증 공장심사는 기업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므로 이들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공장심사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또한 공장심사제도에 있어서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분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품질수준과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되는 심사항목은 과감히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인증제도 세부운영상의 개선 방향

1) 공장심사기준 개선

KS 인증제도가 인증 대상 기업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것에 초점을 두지말고 KS 인증 심사내용에 품질수준을 유지하는데 그리고 제품안전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을 초과하거나 심사기준이 고가의 시험 장비를 보유하도록 하는 등 필요이상으로 까다로운 기준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근 KS인증기관의 경쟁적 시스템 속에서 부실인증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안전 및 품질기준 완화로 KS 인증의 신뢰도에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공장심사 절차나 행정적 측면에서는 기업의 편리성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으나 최종소비자가 안전하게 고품질의 인증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인증심사는 철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안전을 제 1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기업의 편리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

한편, 향후 산업 영역에 따라 차별화 된 공장심사 즉 심사의 차별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 NF 제도의 경우 사후관리에서 공장심사 주기는 1년이나 품질경영 수준이 우수할 경우 2년으로 연장해 주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KS는 동일한 기준으로 공장심사기준과 주기를 적용하고 있는데 품질우수기업 또는 소비자안전 등 모범적 기업에게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 주기를 연장해 주는

차별화된 인증제도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기업의 KS 인증 담당자(품질 담당자)의 위상(권한) 강화

기업의 KS 인증 담당자의 권한 및 위상강화가 KS 인증제도의 효율적 성과에 중요하다. KS 인증제도 개정이 기업 대표에게만 비용절감이 되고 있을 뿐 품질 및 KS 인증 담당 직원에게는 인증업무 변화에 따른 업무증가만 시킨다는 면접조사 결과가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인증 및 품질담당 근로자의 의견 및 노하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어떤 KS 인증제도의 개편도 인증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없다. 따라서 KS 인증제도 운영에서 기업 KS 인증 담당자의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KS 인증제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기업의 품질 또는 인증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품질 및 KS 인증 담당자들의 의견이 기업조직 내에서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들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의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KS 인증에 대한 기업 최고경영자의 인식변화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KS 인증사무국 또는 공장심사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이 기업의 인증담당 근로자의 권한 및 위상 수준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편, KS 인증을 받은 품질관리 담당자들이 주체가 되는 의사교류 채널이나 커뮤니티 구축 및 지원, KS 인증 사후관리에 따른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수강자(인증 및 품질관리 담당자)들이 수동적 위치에서 단순히 교육을 제공받는 것에서 벗어나 수강자들이 직접 강의를 하거나 경험을 제공하고, 또한 타 수강자의 강의나 경험을 제공 받음으로서 보다 능동

적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같은 변화는 인증심사원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에서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기업담당자 및 심사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는 인증심사를 넘어서 창조적 품질관리의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3) KS 인증심사원 관리 개선

인증심사원은 KS 인증제도의 성공적 운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KS 인증 심사원의 자질을 높이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같은 이유에서 인증심사원의 전문성을 근거로 심사원 등급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KS 인증심사원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심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 구축

KS 인증심사원의 전문성 확보, 심사원의 효율적 관리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즉 KS 인증심사원 관련 채용, 교육 및 훈련, 평가 등 심사원을 관리하는 매 단계에서 이들의 전문성을 확인하고 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나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심사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원이 보유할 수 있는 심사코드의 수를 현행 5개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고민도 필요하다. 오래전 한국표준협회는 심사원에 대한 보유코드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KS 인증심사를 받는 기업들이 종종 심사원의 전문성에 불만이 많았다. 앞으로 KS 인증 교육기관이나 관련 사무국에서는 인증 평가를 전담하고 있는 심사원의 정보구축, 특히 KS 인증기관의 확대로 인한 인증심사원의 관리방안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물론 지정된 인증기관에 소속된 KS 인증심사원이 인증심사를 많이 하는 것은 규제 할 필요가 있다. 한국표준협회의 심

사위원회에 대한 적절한 코드부여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5개로 제한하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향후 KS 인증에 있어서 시스템 분야가 강화되고 이를 위한 표준협회의 역할이 분명해 진다면 향후 심사원 코드제도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이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2) 심사원자격 유지에 필요한 실질적 요구사항의 설정

2015년 7월 개정된 KS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심사원 자격관리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르면 인증심사원은 3년마다 인증심사원 심사자격을 갱신하고 직무교육을 1년에 7시간 이상을 받으면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KS 인증심사원의 과거 심사업무에 대한 평가가 배제되어 인증심사원의 실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갱신등록의 경우 심사원의 과거 심사업무 경력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증심사원의 업무수행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인증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심사원의 심사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받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인증심사원의 자격유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고 관련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인증심사원의 학력에 대한 자격기준이 수정(석사3년 → 1년, 학사5년 → 2년, 전문학사6년 → 3년 등)된 만큼 실제적인 심사업무 경력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인증기관 및 인증심사원의 지속적 관리 및 개선 필요

2015년 7월부터 KS 인증기관 복수화가 전격 실시되었으므로 인증기관 및 인증관련 주체는 인증심

사원에 대한 관리 및 평가가 더욱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KS 인증기관과 인증심사원의 등급제 평가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 어느 심사원이 심사를 나가더라도 인증심사 대상기업은 동일한 심사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심사원들 간에도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인증기관과 인증심사원 등급제의 도입은 인증기관과 인증심사원의 경력과 업무수행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등급화시켜 인증기관과 인증심사원들이 스스로 경쟁력이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4) KS 인증제도 운영의 선진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증제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즉 KS 인증제도 운영의 선진화를 위해 ICT 기술을 응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선진 적합성평가 기관들은 국제표준 및 제반 인증과 관련된 규정을 충실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제품생산 및 시험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의 성분, 생산 공정, 사용 환경 등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KS 인증 정책 및 운영에서 ICT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은 시험의 질과 더불어 인증의 유효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다. 또한 인증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여 제품의 시험과 인증에 적극 활용하고 나아가 제품 품질을 제고시키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ICT를 활용한 웹기반 KS 인증 시스템은 인증과 관련한 처리 시간을 단축시켜줄 뿐만 아니라 심사 준비와 관련한 자가 진단 및 자문 기능의 제공이 가능하고 더욱 효율적인 인증 심사의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KS 인증제도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

또한 인증비용을 실질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수수료 인하보다 KS 인증과 관련한 선진화된 관리, 인증시장의 효율적 작동 등을 통한 기

업의 비용절감 가능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인증기업들의 가장 큰 불만은 인증비용인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원가계산을 통해 개선이 어디서부터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파악하여 실질적인 비용절감을 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증심사원 면접 및 전문가면접 조사결과 ISO 인증에 비해 KS 인증비용이 절대적으로 낮고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여지가 적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KS 부실인증 예방 대책 마련

인증기관이 다수인 ISO 인증의 경우 인증기관 사이의 과도한 경쟁과 인증심사원이 사문서위조 등으로 검찰에 관련자가 구속된 사례가 있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종종 발생하면서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 신뢰성은 하락하고 있다. 인증기관 복수화라는 개정된 KS 인증제도의 특성상 다수의 인증기관 사이의 경쟁은 불가피하고 그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KS 인증을 획득하게 되는 등 장기적으로 KS의 부실인증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해외에도 일본과 프랑스를 제외하고 대부분 단일 인증기관 체계(영국 BSI, 독일 DIN)를 유지하면서 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프랑스는 복수의 인증기관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총괄관리기관(프랑스 AFNOR)에서 다른 인증기관을 관리하면서 부실인증을 철저히 예방하고 인증의 공신력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복수의 인증기관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요건이 되면 누구나 인증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쟁체제를 도입하였다.

ISO 인증 등 동일 품목에 대해서 다수의 인증기관이 존재하여 기업의 선택권을 주는 경우 기업의 속성상 비용이 저렴하고 인증신청시 합격이 예상되는 인증기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불합격이 없는 부실 인증이 될 우려가 크다.

지금까지 KS 인증이 타 인증과 차별적인 부분은 인증심사원이 서로 다른 두 기관에서 나와 합동 심사반 형태로 심사하는 것이다. 이는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이 상호 협력하면서 서로를 견제하는 기능을 갖는 우수한 심사체계이다. 이는 KS 인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15년 이상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인으로써, 인증기관이 추가지정 되더라도 이러한 2인 1조의 합동 심사반 체계는 계승해야 할 우수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개정된 KS 인증제도에서는 인증기관 스스로가 소속 심사원에게 인증심사를 맡기는 시스템이 될 수 있어 부실심사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시급하다.

6) 인증 사후관리 방안 강화로 인증의 경쟁력 강화
KS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서비스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증 사후관리 정책이 적극 수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인증을 위한 시험 시에서는 품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시판품 조사에서 불량이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인증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업의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인증 취득사와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도록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증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증의 공신력이다. 인증제도의 공신력이 하락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인증의 신뢰가 무너지게 될 경우 인증시장의 전반적 공신력이 떨어질 것으로 주의해야 한다.

3. 인증제도의 수요자 지향성

KS 인증제도의 활성화는 양면 시장 즉 소비자와 기업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인증 관련 주체들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토대로 사

회공공성 추구가 중요하다. KS 인증제도 운영에서 사후관리의 경우 강력한 행정적 조치, 시판품 현장 조사 등 인증 관련 정부기관의 권한강화 및 인증기관이나 운영주체의 권한도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규제 철폐라는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심사완화 보다는 사회 공공적 목표, 소비자복지증진,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기본적 취지달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KS 인증 기준설정, KS 인증 수수료, 인증심사원 관리 등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기관의 의사결정권은 예상보다 많지 않다. KS제품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인증기관, 기업, KS 관련 운영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해야 한다. 다만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약간의 조정), 인증 소요시간의 단축은 인증기관의 서비스 향상이 필요한 분야이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공산품 인증시장과 인증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인증관련 기업 근로자의 인식, 인증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 근로자의 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 및 현황을 조사하였다. 끝으로 인증에 대한 기업 근로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공산품 인증 시장의 방향 및 인증제도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첫째, KS 인증은 법정 임의인증으로서의 오랜 기간동안 소비자 신뢰를 받아왔으나 최근 민간인증, UL인증, EC마크 등 세계 유명인증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KS 인증의 계속적 성과를 위해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 협조는 중요하다 하겠다.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주체들의 노력, 출고이후 시판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 조

사 등 인증제품 사후관리 강화, 인증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근로자의 인식개선 및 홍보, 소비자 및 기업 근로자 대상 인증 관련 교육 등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국내 시장 뿐만이 아닌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는 품질을 유지하고 KS 인증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KS 인증 사후관리 주기를 단축하고 심사를 보다 엄격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 내부적으로도 품질관리 담당자의 고용 연속성, 품질관리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사후관리 강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복잡하고 다양해져가는 시장과 사회 및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증제도 운영이 중요하다. 사회구성원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지속가능한 인증제도, 기술고도화 및 소비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인증제도, 융복합 산업의 증가와 같은 기술 및 산업 트렌드를 반영하는 KS인증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 특히, 기술 분야 기업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 및 정보교류, 인증기관(KSA)과의 긴밀한 협력, 산업계와 인증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기업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인증 관련 커뮤니티 구축 및 활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결국 국내외 인증관련 정보교류 및 정보축적, 관련 전문가, 이해당사자들과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셋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 공산품 인증기관의 인증목표가 기업과 소비자 신뢰와 혜택에 초점을 두는 상생적 인증제도가 되어야겠다. 특히 법정 인증간 중복인증 품목이 증가하고 동일품목에 대한 중복시험으로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증간 중복되는 품목에 대해 시험결과가 상호 인정, 효율적인 인증제도 운영 등으로 기업의 인증제도에 대한 요구 및 만족도를 반영해야 한다.

2015년 이후 대폭 개편된 KS 인증제도가 실시되

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인증에 대한 기초이해를 돕고, 인증시장의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본 연구는 그 가치가 있다. 본 연구가 인증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인증시장이 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가 인증의 내실화를 다지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경쟁력강화의 인증제도, 인증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병구(2014). KS 인증의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한 KS 인증기관 경쟁체제 도입의 효과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28(3), 77-96.
- 강병구, 전병호(2010). KS 인증 브랜드 파워 제고 방안. 한국표준협회.
- 국가기술표준원(2005). KS 인증제도 실태 및 개선요구조사.
- 국가기술표준원(2007). KS 인증제도 실태 및 개선요구조사.
- 국가기술표준원(2009).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KS 인증제도의 개선방안.
- 국가기술표준원(2015). 산업표준화법령집.
- 김재만(2015). KC인증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 공산품을 중심으로. 한국교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만, 김광수(2015). KC인증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공산품을 중심으로,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7(3), 307-317.
- 서창적, 박진한(2013). 양면시장개념하의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요인에 대한 연구: 양면시장 사례를 중심으로. 서비스경영학회지, 14(3), 157-180.

한국표준협회(2008). KS 인증의 세계화·고품질화 방안 연구결과 보고서.

한국표준협회(2008). KS 인증제품 사용자 고객만족도 조사.

허경옥, 이재학, 전병호(2015). KS 인증제도 변경이 한국표준협회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 한국표준협회 용역보고서.

논문접수일 : 2018. 03. 01

1차수정본접수일 : 2018. 03. 12

게재확정일 : 2018. 03. 17

Corporate Recognition and Evaluation of Certification System for Industrial Products and Improvements of the Certification System in Korea

Choi, Jiyeon* · Yi, Sangbong** · Jeong, Gil-ho*** · Kang, Miyoung****

Abstract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market and certification system of industrial products in detail. In addition, we also examined the recognition of corporate employees related to certification and the requirements and status of improvement of certification system for corporate employees responding to changes in the certification market. Finally, based on the opinions of the enterprise workers on the certification, I proposed the direction of the certification market and the direction of certification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ole of system cooper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in order to upgrade the certification of industrial products. In addition to efforts by certification bodies to improve the certification system, improvement of quality of certification examiners, strengthening of after-certification of certified products such as marketing research, improvement and awareness of consumers and corporate employees about certification, and education on certification for consumers and company workers need.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shorten the KS certification follow-up cycle and to conduct the examination more strictly in order to maintain the quality recognized not only in domestic market but also overseas market and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KS certific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measures to reinforce after-sales management in order to spread the employment continuity and quality control technology of the quality control person in the enterprise.

* Professor, Dept. of Elementary Education, Korea National of Education Univ. (jychoi@knue.ac.kr)

** Professor, Dept. of Technology Education, Korea National of Education Univ. (sbyi@knue.ac.kr)

*** President, Kangnam CS Center Korea Service. (jeo1012@hanmail.net)

**** Council Member, Gangseo-Gu Council of Seoul Republic of Korea. (kangmy87@hanmail)

Second, it is important to operate a certification system that can meet complex and diverse market, society, and consumer needs. It should be changed to a KS certification policy that reflects technology and industry trends such as sustainable certification system that reflects diversity of society members, certification system that reflects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change of consumption market, and increase of fusion combined industry. In the end, it is essential that information exchange related to domestic and overseas certification, information accumulation, related experts, and organic cooperation with stakeholders are essential.

Thirdly, it should be a win - win certification system that focuses on corporate and consumer trust and benefit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duplicate certification items between the statutory certifications increase and duplicate tests on the same items double the burden of time and cost. The test results should be mutually recognized for the duplicated items between the certifications, and the efficient certification system should reflect the requirements and satisfaction of the certification system of the corporation.

※ Key Words: certification system of Industrial products, corporate recognition of certification system, corporate evaluation of certification system, certification system improvement

